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일반기업 R&D투자 1년새 40% 증가... 중소기업은 1조3천억 규모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19년보다 2.9% 늘어난 데 비해 일반기업은 38.9%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자체 성장을 위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정부가 산업경쟁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나뉜다.

특히 코로나 19로 백신 기술, 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각국간 기술경쟁에 불이 붙었고, 정부 역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위험성이 크고 투자규모나 기간도 적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일반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 대기업의 세금 5년간 4조원 깎아준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 7조1000억원 중 55% 가량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2022~2026년 사이 3조90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약 55%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까지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대기업 감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

지만, 퍼주기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해당 공제들은 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한 통상적인 연구개발지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2021 세제개편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저감정책 등 미래 산업동력을 위한 R&D 지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중장기간 큰 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제액 자체의 규모도 대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다.

중견·중소 기업도 가능한 영역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지 살펴볼 수는 있지만, 대기업 공제액 규모만 가지고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작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 증가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건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